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목표\*

－ 목표 및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

양 천 수\*\*

## I. 서 론

지난 2006년 6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 기준 연구”(이하 “인가심사기준”으로 약칭한다)에 따르면, ‘특성화 목표’는 “교육목표”에 속하는 것으로서 형식상으로는 1000점 만점에 10점(1%)을 부여받고 있는 평가지표이다.<sup>1)</sup> 그러나 인가심사기준 전체를 훑어보면, 특성화 목표는 단순히 교육목표에만 해당하는 평가지표가 아니라,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등 거의 모든 분야와 관련을 맺는, 그야말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심사의 뼈대를 이루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성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특성화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대학특성화’를 설정하고, 이를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여 인가심사기준 역시 특성화 목표를 평가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특성화란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에 따라 타 대학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대학의 학문분야, 기능유형을 학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설정하고, 구조개혁 등 특성화 추진에 요구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및

\* 이 글은 지난 2007년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제1차 간담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 총괄지원부 실무위원장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한국학술진흥재단,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 기준 연구』, 117쪽.

2) 이에 관한 최근의 자료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특성화 정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주제발표 및 토론 자료』(2007. 2. 12) 참고.

학내의 자원을 집중 혹은 재분배함으로써, 대학자체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sup>3)</sup> 이러한 대학특성화 개념은 법학전문대학원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은 어느 한 분야에만 정통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암시하는 것처럼<sup>4)</sup>, 법학전문대학원은 일반성과 전문성을 골고루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로서 전문화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5)</sup>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을 특성화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여, 법률전문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할 때는, 한편으로는 특성화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즉 일반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풍부한 교양과 전 영역에 걸쳐 기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이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요컨대, ‘전문성’과 ‘일반성’ 사이에서 실제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성화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영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약칭한다)이 추구하고자 하는 특성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재 ‘공익과 인권’을 특성화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공익’ 부분은 생략하고 ‘인권’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가도록 한다.

## II. 기본 구상

### 1. 특성화 목표로서 ‘인권’

현재 마련하고 있는 영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은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특성화 목표를 설정

3)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특성화 정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료』(2007. 2. 12), 9쪽.

4)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5) 한국학술진흥재단,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 기준 연구』, 57쪽.

한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을 연구하고 법률전문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인권’을 특성화 목표로 추구한다.”

이러한 기본목표는 아래와 같이 구체화된다.

- 인권의 전문화,
- 인권의 대중화,
- 인권의 세계화,
- 인권의 지역화.

여기서 ‘인권의 전문화’와 ‘인권의 대중화’는 서로 한 쌍을 이루고, ‘인권의 세계화’와 ‘인권의 지역화’ 역시 한 쌍을 이룬다.

## 2. 특성화 목표 실천 체계

위에서 설정한 ‘인권’ 부문 특성화 목표는 아래와 같은 체계를 통해 실현된다.

- 제1단계: 특성화 목표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방향 제시.
- 제2단계: 이러한 특성화 목표가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에 반영.
- 제3단계: 특성화 목표에 상응하는 실무연수과정 실시.
- 제4단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인권 전문 법률가로 활동.

그러므로 영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정한 인권 부문 특성화 목표가 성공을 거두려면, 특성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러한 목표가 교육, 실무연수, 졸업 후 활동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 III. 특성화 목표 구체화

## 1. 인권의 전문화

인권의 전문화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은 일반 학부와 구별되는 일종의 ‘전문대학원’인 이상, 교양 수준에서 인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인 동시에 법학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므로, 인권을 학문의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장차 인권전문 법률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 (1) 인권교육의 전문화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대학원으로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인 만큼, 법학교육은 전문직업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는 인권교육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물론 학부에서도 인권교육을 행할 수 있다. 현재 영남대가 교양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는 “인권과 법”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양과정을 통해 일반 학부생들도 인권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과 ‘인권감수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하는 인권교육은 전문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인권에 관한 문제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 배후까지 깊게 파고드는, 더 나아가 법학,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원용해서 인권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

### (2) 인권연구의 전문화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학문을 심오하게 연구하는 공간인 이상,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이는 주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혹은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가령 인권법 전임교수는 인권에 관한 새로운 이론 틀, 세계 인권에 관한 현황, 새로운 인권사례 발굴 및 해결 등과 같은 주제를 연구하고, 이를 논문 등의 형태로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법 전임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권법에 관심을 갖는 혹은 관련을 맺는 법 영역의 교수 역시 인권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역시 - 미국 로스쿨 학생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 인권 관련 저널을 발간하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공동연구자로서 또는 보조연구자로서 인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3) 졸업 후 직업으로서 인권 관련 법률전문가

마지막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인권 영역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종사하는 전문 법률가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변호사는 흔히 ‘공익과 인권의 수호자’라고 말을 하므로, 모든 법률가는 자연스럽게 인권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권 개념은 다소 넓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권 개념으로 새겨야 한다. 이와 달리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종사하게 될 인권 영역은 이 개념보다 더욱 전문적인 인권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국제인권법 영역이나 소수자 인권, 채무자 인권, 노동 인권, 지역 외국인 인권 영역에서 종사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권의 전문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 2. 인권의 대중화

두 번째 구체적인 목표로서 인권의 대중화를 거론할 수 있다. 인권의 대중화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닌 또 다른 측면, 즉 대중성과 관련을 맺는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법학전문대학원은 일반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말하자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성과 동시에 대중성을 갖추어야 하는 셈이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일반 대중의 인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권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 (1) 대중 지향 인권연구 및 교육

위에서 인권교육은 전문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인권교육은 대중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인권교육이 자기만족적인 것이 되거나 또는 현실과 괴리된 것이어서는 안 되고, 대중을 지향하는, 다시 말해 ‘지금 대중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적 상황’을 염두에 두는, ‘현재 있는 인권’을 지향하는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지역사회와 인권의익을 대변하는 인권연구 및 교육

다음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하는 인권연구 및 교육은 영남지역의 인권의익을 충족시키고 대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영남지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와도 맞물린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단순히 법률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넘어서 어떤 형태로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에서 사회의 인권의익을 대변하는 인권전문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인권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은, 영남대 법학

전문대학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인권의 세계화

세 번째 구체적인 특성화 목표로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권의 세계화를 추구한다. 인권의 세계화는 위에서 언급한 ‘인권의 전문화’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 이를 통해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인권 문제까지 시야에 넣을 예정이다. 크게 세 가지 실천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 (1) 국제인권규범 연구 및 형성에 기여

첫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인권규범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인권규범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두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을 연구·형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국제인권 관련 전문 법률가로서 각 국제인권기구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 (2) 동아시아 인권규범 연구 및 형성에 기여

둘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동아시아 인권규범을 연구하고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유럽공동체는 이미 유럽인권규약을 제정하여 각 회원국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동아시아도 가까운 미래에 나름의 인권규범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고, 새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시민적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을 한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동아시아 인권규범을 연구하고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북한인권규범 연구 및 형성에 기여

마지막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북한인권규범을 연구하고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조만간 다가올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sup>6)</sup>

6)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방식에 관해서는 양천수, “상호합법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북한 인권 문제”,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2007. 5), 211-234쪽.

#### 4. 인권의 지역화

마지막 특성화 목표인 인권의 지역화는 ‘인권의 대중화’와도 맞물리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크게 두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 (1) 영남지역에 고유한 인권문제 연구 및 교육

우선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영남지역에 고유하게 등장하는 인권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예를 들어, 영남지역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고, 다수의 공단이 있는데, 이들 외국인이나 공단 노동자들의 인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 영남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조화될 수 있는 인권 연구 및 형성

나아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영남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조화될 수 있는 인권을 연구하고 형성하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 사실 영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내포하는데, 장점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그 만큼 많이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그 때문에 서구에서 형성된 인권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간 호주제 문제 등을 통해 전통 유림과 여성계가 대립한 사실 등이 이를 예증한다. 그러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 둘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인권 개념을 연구하고 형성하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 사이의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 IV. 인권 관련 교과목 편성의 방향

위에서 구체화한 특성화 목표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현하려면, 이 특성화 목표를 반영한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교과목 편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기본원칙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인권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고자 한다.

- 인권의 전문화 · 대중화 · 세계화 · 지역화에 따른 교과목 편성,
- ‘인권감수성’을 지향하는 교과목 편성,
- ‘인권의 통합과학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공교수진이 참여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 **(1) 인권의 전문화 · 대중화 · 세계화 · 지역화에 따른 교과목 편성**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 목표의 구체화 원칙인 인권의 전문화 · 대중화 · 세계화 · 지역화에 따라 교과목을 편성하고자 한다. 우선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권의 전문화에 상응하도록 인권 관련 전문 교과목을 편성하고자 한다. 교양 수준이나 개괄적인 수준을 넘어서, 대학원생 수준에 맞는 전문 인권법 강좌를 개설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중 지향적인 인권 교과목을 편성하고자 한다. 이는 인권의 대중화에 상응한다. 세 번째로 세계화 관련 인권 교과목을 편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영남지역과 관련을 맺는 인권 교과목을 편성하고자 한다. 이는 인권의 지역화를 반영한 것이다.

### **(2) ‘인권감수성’을 지향하는 교과목 편성**

두 번째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과목을 편성할 때 ‘인권감수성’을 지향하고자 한다. ‘인권감수성’이란 ‘인권에 대한 애정’ 혹은 ‘인권을 향한 실천적 의지’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인권감수성’은 인권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권 연구와 인권 교육은 반드시 인권 실천을 전제로 해야 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법학 연구 및 법학 교육은 반드시 인권이라는 관점을 고려해야 함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다양한 전공 교수진이 참여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마지막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권법의 통합과학적 성격’을 고려하여, 인권 관련 교과목을 단순히 몇몇 인권 전담 교원들만이 담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전공 교수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실의 인권 문제를 더욱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통합과학적 인권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2. 교과목 편성**

### (1) 3단계 편성

이러한 세 기본원칙에 따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음 3단계에 맞춰 인권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고자 한다.

- 인권기초론,
- 인권일반론,
- 개별인권론.

### (2) 인권기초론

먼저 모든 인권 교과목의 기초가 되는 인권기초론 과목을 편성하려 한다. 이 과목은 기초법 전공자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 과목을 통해 참여자들은 인권감수성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 개념과 관련된 기초법적인 관점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인권일반론

인권일반론은 인권법에 대한 총론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권과 법 세미나’가 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 인권법의 기본 개념 및 구조 등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4) 개별인권론

개별인권론은 개별 인권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권법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염두에 둔 ‘노동과 차별’ 및 ‘농업법’을 개설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제인권법’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인권법’, ‘국제기구론’, ‘국제인도법’, ‘유럽인권법론’을 편성하고자 한다. ‘사회권’ 영역 과목으로는 ‘교육과 인권’을 개설하고자 하고, ‘현대과학과 인권’ 영역 과목으로 ‘의료와 인권 세미나’ 및 ‘환경과 인권’을 개설하려 한다. 이외에 ‘형사절차와 인권 세미나’ 및 ‘인권운동론’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목들을 통해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권 연구 및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 V. 특성화 목표와 관련한 문제점 -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특성화 목표와 교과목 편성 지침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왔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고 있는 영남대 법대가 특성화 목표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서 인권법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가심사기준에 따르면, 전임교원은 지난 5년 동안 800% 이상의 연구업적을 갖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개설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해 300% 이상의 교과목 적합성 지수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영남대 법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인권법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때문에 인권 관련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것도 문제를 겪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조만간 이루어질 공채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인권’이라는 주제가 다소 일반적이어서, 특성화 목표로서 설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는 공익과 인권의 수호자’라는 통상적인 이해에서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권을 특성화하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듯 해, 특성화 목표로서 그리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이라는 특성화 목표가 일종의 ‘상품가치’로서 매력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값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3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 학기에 일 천 만원 상당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처지에서 보면, 장차 인권 전문 법률가로 활동하는 것이 이들에게 크게 매력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인권의 세계화’를 특성화 목표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권이라는 특성화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장에는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머지않아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권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